# 소음·이격거리 지자체별 제각각…설치기준 일원화 시급

## 신재생에너지 민원 원인과 대책

### 사업체·주민들간 갈등 끊이지 않아

### 정부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

### 주민 참여 보장 등 상생·공유 필요

정부가 최근 그린뉴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분야로 추진중인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와 주민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청정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발전설비를 위한 소음과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 운영 지침 기준 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야 하고, 일선 지자체는 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 제각각**=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조례 및 운영지침 등이 제각각이다.

영암과 장흥·강진군 등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구분없이 10가구를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100m(10호 미만)에서 500m(10호 이상)로 나뉜다.

이들 지자체가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규제가 완화된 곳으로 꼽힌다.

전남에서 풍력발전이 가장 활성화된 영광군의 경우는 10가구를 기준으로 500m에서 1km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밖에 곡성군은 300m에서 500m, 진도군은 250m에서 700m이며, 해남군과 고흥군은 500m에서 1km, 신안군은 1km에서 1.5km 등으로 22개 시·군 모두 규제 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남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 이격거리를 최고 1km 이상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화순군의회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애초 1.5km에서 2km였던 이격거리 제한을 800m에서 1.2km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회의 조례개정에 반발해 주민 조례 개정안를 발의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는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반면, 풍력발전의 선진국 그룹에 꼽히는 덴마크와 네널란드, 독일의 경우에는 소음규제와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모든 지역에 한도치로 적용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성공사례 주목**=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상생, 즉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사업체와 주민들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 상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의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신안군, 영광군, 해남군 등이 속한다.

신안군은 마을 앞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영광군과 해남군에서는 농업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농지에 태양광발전소을 설치해 농작물 소득과 전력 판매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 간 소통과 상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격거리 조례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순군 밤실산 일대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협업사업을 제시해놓고 있다. 밤실산 일대에 3만여평 (9만 9866㎡)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260억원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발전단지 내 주변마을 상생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둘레길 조성과 국화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단지 거점도 계획중이다. 특히 최첨단 친환경 버섯농장을 통한 '스마트 팜 벨리' 조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려는 협업사업은 눈여겨 볼만한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을 추진중인 A업체는 "주민 참여에 우선순위를 둬 이익·가치를 공유하고 갈등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며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밤실산 풍력발전단지를 지역 내 최고의 발전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단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권주자 선호도, 이재명 30%대 첫 돌파…1강 독주체제 구축

## 리서치앤리서치 조사…32.5%

## 호남서도 이낙연 대표 크게 앞서

## 윤석열 17.5%·이낙연 1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첫 30%대를 돌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자 이 대표의 고향인 호남에서도 이 지사가 이 대표를 2배 이상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32.5%로 1위에 올랐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30% 지지율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0%로 이 지사의 뒤를 이었다.

세 사람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0%), 홍준표 의원(3.9%), 정세균 국무총리(2.8%), 오세훈 전 서울시장(2.7%),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2.0%)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이 지사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도 이 지사는 47.8%를 기록하며, 22.2%에 그친 이 대표를 '더블스코어' 차이로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작년 12월보다 5.2% 포인트 상승한 23.4%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조사에서 1위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5.5%포인트 하락한 18.4%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 대표의 선호도는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하며 13.6%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10%포인트 넘게 올라 21.8%를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기반 격인 광주·전라에서도 8.5%포인트 오른 22.1%로 1위를 차지했다. 호남에서 이 대표의 선호도는 13.1%포인트 급락한 21.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구시대 유물 정치로 대립 부추겨"

## 북 원전 건설 논란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다', '선을 넘은 색깔론'이라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하고,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된 것도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력을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이용섭 시장 "4자 협의체서 공항 이전 해결"

## 첫 임시회서 기존 입장 재확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와 광주시·전남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상생 과제인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중앙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 없이는 민간공항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공동번영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비전인 만큼 전남도와 진정성 있는 협력을 통해 공동 용역 의뢰 등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협약대로 군 공항과 별개로 올해 민간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항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4자 협의체와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용역은 무기한 중단됐다. /최권일 기자 cki@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